

이 자료는 2005. 5. 19(목) 朝刊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개토론회 자료

2005~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

- 국방분야 -

- 2005년 5월 18일(수) 14:00~17:00
- 계룡대

국가재정운용계획
국방분야 작업반

국방분야 작업반

반 장 한국개발연구원 : 조동호 기획조정실장
기 획 예 산 처 : 사회재정심의관

간 사 기 획 예 산 처 : 국방예산과장

반 원 국 방 대 학 원 : 한용섭 교수
외교안보연구원: 김성한 교수
삼성경제연구소: 동용승 경제안보팀장
한국국방연구원: 박주현 자원관리연구센터장
국 방 부 : 중기계획과장

목 차

I. 그동안의 재정투자분석	1
1. 우리나라 안보환경	1
2. 재정투자 추이	2
3.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	3
II.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	6
1. 정책방향	6
2. 재정투자 방향	7
3. 국방분야의 5년후 미래상	9
III. 부문별 · 사업별 투자계획	10
IV. 쟁점토론: 적정 국방비 규모 및 군 구조조정 방향 · 15	
1. 적정 국방비 규모	15
2. 군 구조조정	18

I. 그동안의 재정투자분석

1. 우리나라 안보환경

- 남북한간 교류·협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, 북한의 핵개발 등 군사적 위협 상존
 - 북한은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, 핵·미사일·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지속 개발
 - * 북한은 미사일(총800여기), 화학무기(2.5~5천여톤), 특수전부대(약 12만명) 등 비대칭전력 보유
 - 특히, 북한의 장사정포(170mm, 240mm) 및 중·장거리 미사일은 수도권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에 두고 있음.
- 또한, 지역국가들간 다자안보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, 역사왜곡, 도서영유권 분쟁 등 잠재적 분쟁요인 내재
 - 역내 국가간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
- 미국은 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(GPR)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재배치·조정을 추진
 -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역할 증대가 요구
 - 주한미군 12,500명을 '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

- 한·미군간 10개 군사임무 연차적 전환('04~'06)
 - * JSA 경비, 대화력전 임무수행, 후방지역 제독작전 등
- 주한미군은 현대화를 위해 '06년까지 150개 분야에 110억달러 투자

2. 재정투자 추이

-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'8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였으나, 참여정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

	'80년	'90년	'00년	'02년	'04년	'05년
• 정부재정대비(%)	34.7	24.2	16.3	14.9	15.8	15.5

- 최근('01~'05) 국방비 증가율(7.9%)은 예산규모 증가율(4.7%)보다 높은 수준

- '03년까지 예산규모 증가율보다 낮았으나 참여정부이후 예산규모 증가율 상회

- 주한미군 감축 등 여건변화에 대응, 자주국방 재원확보

	'01	'02	'03	'04	'05	연평균 증가율(%) ('01~'05)
▪ 국방비(%)	6.3	6.3	7.0	8.1	9.9	7.9
▪ 예산규모(%)	9.5	7.3	8.8	△1.0	3.8	4.7
▪ 일반회계(%)	11.8	10.5	7.8	1.7	7.2*	6.7

*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회계전환분 제외

□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가 국방비의 2/3, 전력투자비는 1/3 수준을 점유

○ 기간 중 국방비 증가액의 절반이 인건비로 사용

	'00	'01	'02	'03	'04	'05	(%) 증가액비중 (‘00~‘05)
▪ 인건비	38.3	42.1	42.8	43.3	42.2	41.3	0.48
▪ 경상비	24.8	24.0	23.7	23.9	24.6	24.8	0.25
▪ 투자비	36.9	33.9	33.5	32.8	33.2	33.9	0.27

* 증가액비중: '00~'05년중 부문별 증가액/국방비 증가액

3. 재정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

가. 개선효과

□ '74년~'04년간 전력증강에 투자된 비용은 74조 7,429억원(전체 국방비의 약 30%) 규모로 주요무기체계 국내개발 및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

○ 주요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구비

- K1A1전차, K-9자주포, 중어뢰, KT-1기본훈련기, T-50 고등훈련기 등 국내 개발

- 무기국산화로 비용절감 및 방산물자 수출에 기여

* 비용절감액(해외구매→국내개발) : 36.9조원

방산물자 수출('85~'04년) : 28.8억달러

구 분	투자비	목표	사업내용
1차 (‘74~‘81)	3조 1,402억원	최소 방위전력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후장비 교체 ○ 전방지역 진지축성 ○ 고속정 건조 ○ 항공기(F-4) 구매
2차 (‘82~‘86)	5조 3,280억원	방위전력 보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주포, 한국형전차, 장갑차 개발 ○ 주요 전투함정 ○ F-5 기술도입 생산
3차 (‘87~‘96)	26조 105억원	방위전력 완비와 미래형 전력 기반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차, 장갑차, 자주포 양산 ○ 헬기, 잠수함, F-16전투기 기술도입 생산
4차 (‘97~‘04)	40조 2,642억원	현존 및 미래위협에 대비 첨단 핵심전력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K1A1전차, K-9자주포, 대구경다련장포 ○ F-15K전투기, KF-16전투기, C4I체계 구축, 구축함

나. 미흡한 분야

□ 병력 위주의 재래식 전력구조에서 기술정예군으로의 전환 미흡

* 군정원 변천(명)

‘50~‘55	‘60~	‘61~	‘77~	‘88~	‘95~‘04
720,000	630,000	600,000	630,000	655,000	691,600

□ 전력투자 제한으로 노후·구형장비 상당수 운용

○ 전체 무기/장비중 구형장비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

* 전차, 화포, 전투기의 구형장비 점유율 : 42~72%

□ 연구개발 비중이 낮아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 확보 제한

- 주요 무기체계 국산화 지연 및 군사기술의 대외 의존 경향

(단위 : '01년 기준, 백만달러, %)

구 분	미국	영국	프랑스	한국
• 연구개발비	40,800	3,986	3,145	655
• 대 국방비	13.8	12.2	13.0	4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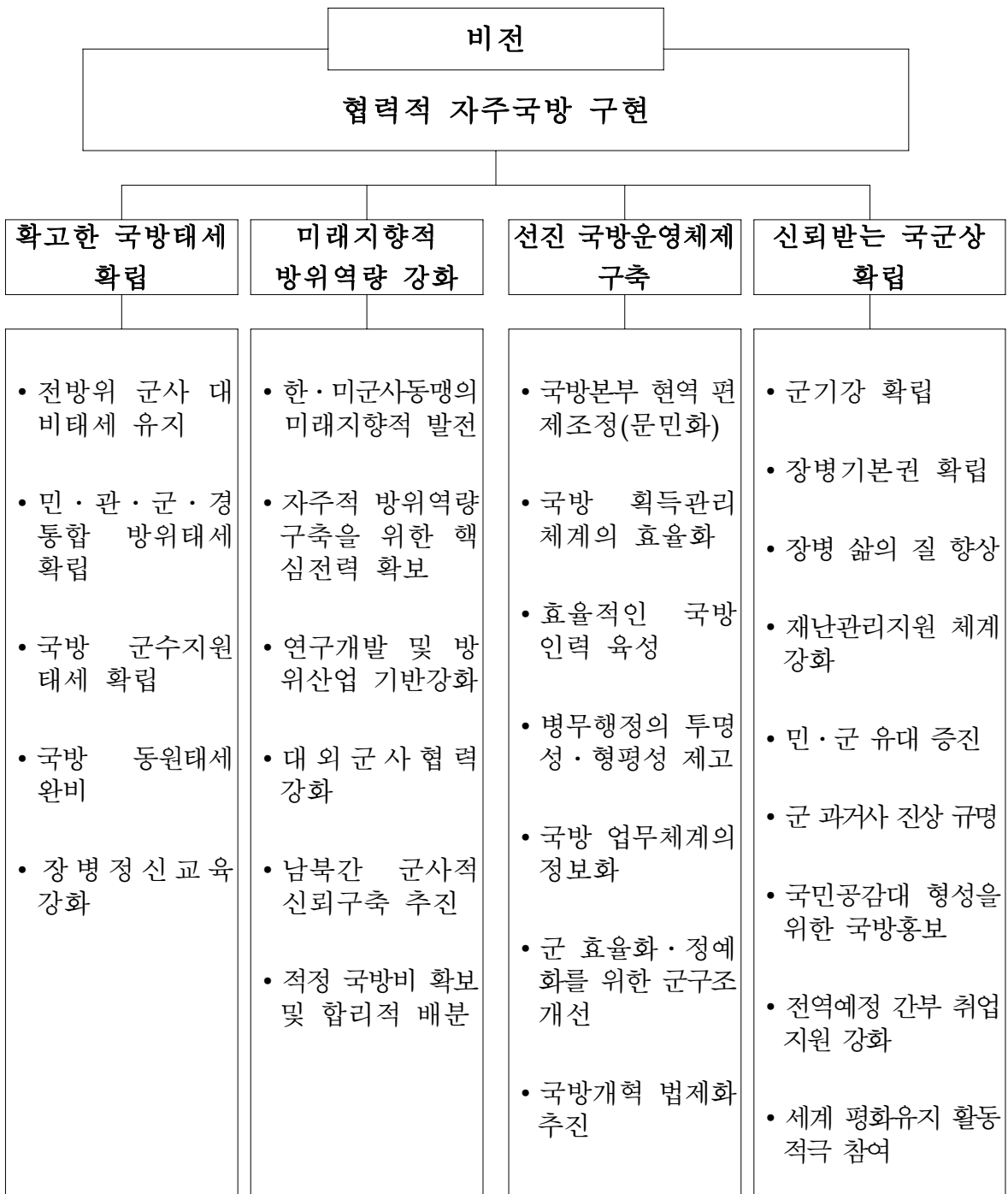
자료 : The Military Balance 2002-2003.

□ 신세대 장병에 맞는 복무여건 개선 미흡

- 사병들의 내무반은 좁고 노후화 되었으며, 각종 편의시설 부족
 - 병영 내무반 수용면적 협소(0.7평/1인)
- 군 간부 숙소의 37%가 15평 이하 협소 및 25년 이상 노후화
- 병사 봉급(상병기준 월 46,000원)은 기본경비(8만원 수준)의 절반 수준

II.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

1. 정책방향



2. 재정투자 방향

□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

-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
 - 용산기지 이전, 미 2사단 재배치 등 주한미군 재조정을 원활하게 추진
 - 주한미군이 담당했던 JSA 경계임무, 대화력전 수행본부, 후방 지역제독작전 등 10대 임무를 '06년까지 연차적으로 한국군에게 전환
-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조기 확충
 -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감시·정찰능력 확보와 전제대에 걸친 실시간 지휘통제·통신체계 구축
 - 중심표적에 대한 전략적 타격 및 대화력전 능력 확충
 - 구형·노후장비의 성능을 개량하고 대체전력을 확보하여 기반 전력 내실화 추진
 -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강화로 첨단기술 수준 확보

□ 군구조 개편과 국방개혁

- 합참의 위기관리와 작전기획 능력을 향상시켜 전쟁기획 및 수행 기구로서 편성과 기능을 보강
- 병력 및 부대구조는 인력중심에서 미래 전에 적합한 정예 과학기술 군구조를 지향
- 국방개혁 법제화 추진

- 군구조 개선 및 적정 병력 규모- 3군 균형 발전을 통한 통합 전투력 극대화
- 국방부분부 문민화 및 합참조직 기능 강화 등

□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군 복무여건 개선 지속 추진

- 병 봉급은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인상
- 사병내무반을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개선
- 노후화된 군숙소는 국민주택 규모로 개선하고, 노후·부족한 독신자숙소는 1인 1실 규모로 연차적 개선
 - 예산 이외에 BTL 방식 등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조기 개선

□ 국방비 투자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 유지

- 군 구조개편 등을 통해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의 비중을 줄이고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에 중점 배분

3. 국방분야의 5년후 미래상

- 전력투자비를 국방비의 35% 수준에서 41% 수준으로 제고
-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충 및 기술정예군 육성
- 국방 R&D비중 단계적 확대
 - '05년 4.6% → '09년 5.9% → '15년 10.0%
- 장병 사기복지 등을 통한 무형전력 증강

	2005년	2009년
• 전력투자 비중	• 35%	• 41%
• 전력수준	• 제한된 육상, 해상, 공중작전 능력	• 조기경보 및 감시능력 확보 • 육·해·공 작전능력 향상 • 정보·기술군 육성
• 국방 R&D	• 국방비 대비 4.6%	• 국방비 대비 5.9%
• 병영내무반개선 (침상형→침대형)	• 14%	• 50%
• 간부숙소개선 (24평~32평형)	• 63%	• 100%
• 병 봉급 (상병기준)	• 4만 6천원	• 8만원

Ⅲ. 부문별 · 사업별 투자계획

□ 전력투자 부문

- 독자적 감시 · 정찰 / 실시간 지휘통제 · 통신체계 구축
 - 북한 군사력 이동 및 변화사항을 24시간 감시 가능한 정보 · 조기경보 전력 확보
 - * 조기경보통제기, 다목적 정찰위성, 고고도 UAV 등
 - 실시간 전투력 통합 운용을 위한 전장관리체계 구축
 - * 군 위성통신, 합동지휘통제체계 등
- 중심지역 전략표적 타격능력 구비
 - 대량살상무기 타격 가능한 전투기 · 정밀유도무기 확보
 - * F-15K, GPS 유도폭탄 등
 - 양적 열세 극복을 위한 대화력전 전력 보강
 - * K-9자주포, 대구경다련장 등
 - 공중 및 해양 우세권 조기장악을 위한 전력 확보
- 각군 기반전력 내실화로 현존 전투력 발휘 보장
 - 성능개량, 노후장비 교체 등 전력의 질적 개선
 - 적 항공기/화생방 공격대비 방호전력 확충으로 생존성 강화
 - * 중 · 장거리 대공유도무기, 천마, 신형제독차 등
 - 예비전력 보강, 동원전력 강화 및 후방지역 안전 확보

- 국방연구개발 투자비 확대로 첨단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
 - * 국방 R/D 비중 : 4.6%('05) → 5.9%('09)
- 무기획득 업무를 효율화, 투명화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신설 추진('06년 1월)
 - 분산된 획득조직의 통폐합으로 종합적인 획득업무 수행
 - 사업관리 조직의 통합으로 사업 책임자가 획득업무 전 과정을 책임관리
 - 국방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센터 설립

□ 군 인력구조 부문

- 미래에 적합한 정예과학 기술군 구조 달성을 위하여 군 인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발전
- 효율적인 군 운용을 위해 '08년까지 병력 4만명 감축
 - 유사·공통기능부대 통합 운영
 - * 자운대/남성대 지원부대, 전투근무지원부대 등
 - 신·구형장비 교체와 연계하여 부대구조를 축소 조정
 - * 구형 방공전력 보유부대 등
 - 임무 및 기능 조정·통합을 통한 일부 부대 정비
 - * 향토·동원사단, 특전·특공여단 등
 - 군수·복지·시설분야 등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아웃소싱 확대

□ 장병사기복지 부문

- 병 봉급은 '08년까지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현실화
 - * 46,600원('05) → 80,000('08)
- 병영내무반은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개선
 - * 병영시설 개선율 : 14%('04) → 50%('09)
- 군 숙소는 15평 이하 협소 및 25년 이상 노후숙소 대상 국민주택 규모(24~32평)로 단계적 개선
 - 조기에 군 숙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'05~'07년까지 18,000세대를 BTL방식으로 추진
 - * 군숙소 개선율 : 63%('04) → 100%('09)
- 독신자 숙소는 노후 및 부족소요 연차적 확보
 - * 독신자 숙소 확보율 : 55%('04) ⇒ 88%('09)

□ 교육훈련 부문

- 실전적 훈련여건 보장을 위한 훈련장 단계적 확보
- 교육용 탄약보급율은 사격기준표 대비 100% 보장, 훈련성과 극대화
- 전투기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해 적정 비행시간 반영
- 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

□ 국방정보화 부문

-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군수통합·전자조달·수송 정보체계 등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를 '09년까지 구축 완료

- 광역·근거리전산망을 확장/증속하여 원활한 정보유통 보장
 - * '08년까지 독립중대급 이상 전산망 구축
- 정보화 기술발전 추세와 국방정보화 자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분산운영중인 소규모 전산실을 지역별 통합
 - * 메가센타구축 : 241개소('04) → 61개소('07)

□ 예비전력 부문

- 예비군훈련장 부족소요 확보로 훈련 내실화 및 교육성과 제고
 - 종합/동원훈련장 부족량은 '10년까지 단계적 확보
 - 15년이상 노후화된 동원막사의 개·보수 사업 추진
-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향방예비군 장구류 단계적 확보
- 예비전력 훈련여건 개선
 - 일반훈련참가자 보상금은 실비수준 보상
 - 안보교육관, 실내사격장, 시가지 전투훈련장은 연차적 확보

□ 환경보전 및 국민권익보호 부문

-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단계적 확보
 - 오폐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확보하되 필요시 지자체와 연계
 -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복원은 지속적으로 추진
- 특수임무수행자 등 특별법에 의한 보상소요는 '09년까지 완료
 - * 특수임무수행자, 삼청교육 피해보상, '59년이전 전역군인퇴직급여, 한국전쟁 중 후방지역 공로자 보상
- 군사용 사유재산 정리 및 탄약고주변 민가이전 추진

□ 주한미군 기지이전

-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한미간 방위력 증강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'09년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 추진
-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하되 부지매각, BTL 방식 등 다양한 재원확보방안 강구

IV. 쟁점토론: 적정 국방비 규모 및 군 구조조정 방향

1. 적정 국방비 규모

-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국방비 확충 필요성 제기
 - 동북아 균형자 및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적정수준의 국방비 필요
-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위해 국방비 비중을 '09년까지 GDP대비 2.7%까지 확대 요구
 - 우리의 GDP대비 국방비 수준은 분쟁·대치국 평균 5.2%보다 훨씬 못 미치며 세계평균 2.7%보다도 낮은 수준

* GDP대비(%) : ('05) 2.47 → ('06) 2.59 → ('07) 2.66 → ('09) 2.7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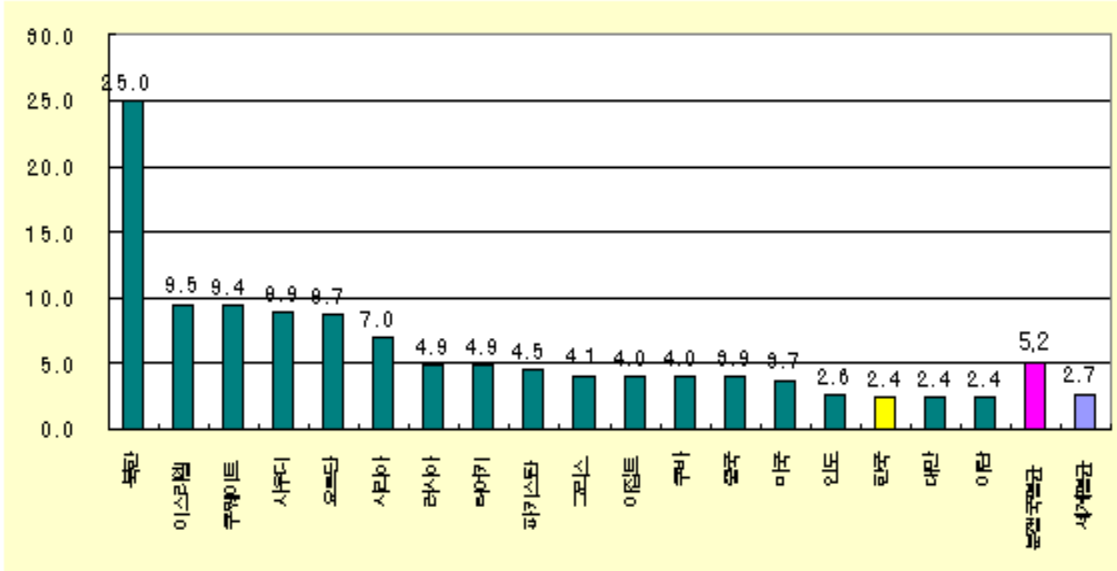
<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>

(단위 : '03년 기준, %, 달러)

구 분	중국	미국	영국	프랑스	독일	한 국
GDP대비 국방비 비율	3.9	3.7	2.4	2.6	1.5	2.4
국민 1인당 국방비	43	1,391	722	765	426	307

자료 : The Military Balance 2004-2005.

< 주요 분쟁·대치국의 GDP대비 국방비('03년 기준) >



* 분쟁국 평균은 북한을 제외한 평균치임.

- 또한 우리의 경제능력 고려시 GDP대비 2.7% 수준의 국방비 부담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
 - 단, 2009년까지 자주국방 토대마련을 위한 집중 투자 필요 (무기체계의 특성상 소요부터 획득까지 장시간 소요)
 - 경제규모 세계 11위이나 GDP대비 '03년 국방비(2.4%)는 세계 56위, 국민 1인당 국방비(307달러)는 세계 31위에 불과
- 반면 북한의 경제능력 감안시 북한의 위협은 감소되었다는 주장도 존재
 - 국방비 투자 누계를 살펴보면 한국이 북한을 상회하고 있으며, 이미 군사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주장
 - 국방비 증가는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초래하여 오히려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

- 또한 징병제에 따른 사병 복무의 사회적 비용(인건비) 감안시, 우리 국방비 규모는 주변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주장

< GDP대비 국방비 비교('03년 기준) >

	한국 (예산)	한국* (사회비용)	미국	일본	영국
GDP대비 국방비(%)	2.4	3.7	3.7	1.0	2.4

* 장병 인건비 : 0.2조원 → 9.6조원(하사 2호봉 년 18.5백만원으로 계산)

- NATO 방식의 국방비 개념으로는 GDP대비 3%를 이미 상회하였다는 주장도 있음.

- 우리 국방비는 전투경찰, 해양경찰 경비, 병무 행정비 등 국방비로 분류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주장

- 또한, 국방비 포괄범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

- 예산이외에도 BTL사업으로 군인아파트 등 추가 건립

* '05~'09 계획에 군숙소, 용산기지이전사업의 BTL규모 포함시 '09년 GDP대비 2.7% 수준 확보

- 한정된 재정여건상 국방비의 대폭 증액은 복지 및 성장잠재력 분야 등의 상대적 위축이나 적자국채발행 규모의 추가적 확대로 귀결

- 공적자금 상환, 교부금, 사회보장 지출 등 경직성 경비소요는 대폭 증가 추세

- 복지지출은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GDP 대비 비중이 현재의 9.6% 수준에서 '15년 15.7%, '30년 22.8%에 이를 전망

- 따라서,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 자주국방 건설을 위한 재원은 확보하되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GDP대비 몇 %식 재원배분은 지양할 필요

2. 군 구조조정

가. 필요성

-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대비 및 국방의 자주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 전력증강 투자 부담 가중
- 우리군의 병력집약형 구조 특성에 따라 국방비 증가분을 대부분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에서 차지

< 분야별 국방비 비중 : 일반회계 기준 >

	'00	'01	'02	'03	'04	'05	(%) 증가액비중 (‘00~‘05)
▪ 인건비	38.3	42.1	42.8	43.3	42.2	41.3	0.48
▪ 경상비	24.8	24.0	23.7	23.9	24.6	24.8	0.25
▪ 투자비	36.9	33.9	33.5	32.8	33.2	33.9	0.27

* 증가액비중: 00~05년중 부분별 증가액/국방비 증가액

- 현대전의 첨단 정보·기술전 양상에 따라 선진국은 정보·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발전
 - 군 인력감축 및 국방비 절감 병행 추진

< 주요 선진국의 GDP대비 국방비 및 인력규모 >

(단위 : %, 만명)

국 가	국방비		현 역		예비역	
	1985	2001	1985	2001	1985	2001
미 국	6.5	3.0	213.0	137.8	117.0	86.4
독 일	3.2	1.6	47.8	29.3	77.0	31.5
영 국	5.2	2.4	32.7	20.6	29.4	29.3
프랑스	4.0	2.6	46.4	29.4	39.3	41.9
이태리	2.3	1.9	38.5	26.2	79.9	6.5

자료 :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

나. 외국의 사례

1) 미 국

- 군 구조의 경량화와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추진
 - 냉전종식을 계기로 병력은 1/3정도로 감축하여 군의 몸집을 대폭 줄이는 대신 무기체계는 가볍고 빠르며 작은 첨단무기 위주로 획득
- 첨단 디지털군으로서 C4ISR-PGM 체계를 중심으로 전력 구조가 재편되고, 우주-공중-해상-지상의 모든 체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디지털화가 활발히 진행
-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능력 및 전력유연성을 동시에 갖출 목적으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(GPR)을 적극 추진

2) 중 국

- '91년 걸프전을 계기로 미래전의 승패는 첨단기술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군사적 방향을 인민전쟁, 인해전술 위주의 대군주의 개념에서 과학기술 위주의 정예주의와 국경밖에서 적의 침략을 차단, 거부하기 위한 '적극 방위전략'으로 전환
- 병력 정예화를 위해 '85년 390여만명의 병력에서 '02년에는 160만명을 감축한 227여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, 향후 20~30만명을 추가로 감축하여 장기적으로 200여만명을 유지할 계획

3) 일 본

- '04.12월에 발표된 「신방위대강」은 일본의 21세기 안보정책을 담고 있음.
- 일본 본토에 대한 전면 침공에 대비한 냉전형 전력구조를 9·11 테러 이후의 전략 환경을 반영하여 즉응성, 기동성 전력으로 재편한다는 구상
 - 육상 자위대의 병력 5천명과 재래식 무기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, 전차는 900대에서 600대로, 전투기는 300대에서 260대로, 호위함은 54척에서 47척으로 감축
 - 육상, 해상, 항공 자위대의 유기적인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3군이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고 일원적인 지휘·통제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
 -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 조직 및 장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맞추어 군의 효율적이고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C4I체계 정비 강화

4) 호 주

- 호주는 제한된 국방예산(GDP대비 2% 내외)하에서 성공적인 군 개혁을 이끌어내어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.
 - 대규모 획득비용을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의 대량 구매 대신 현재 보유한 무기체계를 정보화시대의 소요에 맞게 성능을 개량하고 동맹전력과 상호운용성 제고에 중점

다. 군 구조조정 방향

□ 전체적인 방향

- 군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 3군간 균형발전을 이루고, 군 수뇌부로부터 최전방 전투보병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C4I체계 완비
- 군사력 운용의 즉응성, 기민성,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휘체계의 단순화 및 부대구조의 경량화, 슬림화 추진
- 이를 위해
 - ① 유사·공통기능 부대를 과감하게 통폐합
 - ② 신·구형장비 교체와 연계하여 부대구조를 축소 조정
 - ③ 독자적 전쟁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상부조직/지휘구조 개선
 - ④ 정보감시·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 및 정밀타격을 위한 군 구조 발전

□ 전력구조 조정방향

- 정보화·과학화된 첨단장비는 점차 확대하고, 구형장비는 단계적으로 도태 조정

-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첨단전력체계(High)와 기반전력체계(Medium-Low)가 적정비율로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정구조로 발전
- 한편, 장비구조의 변환과정에서 신·구형 장비교체와 부대 통폐합이 서로 맞물려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
 - 첨단장비의 도입으로 구형장비가 도태 → 관련부대의 통폐합 및 병력소요 감소 → 장비운영비, 부대운영비, 인력운영비, 교육훈련비 등의 절감효과 → 절감된 재원으로 첨단장비의 획득 재원으로 재투자

□ 병력구조 조정방향

- 병력규모는 안보상황의 변화전망과 무기체계의 첨단화 추세, 군의 안정성과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, 신축적으로 조정
 - 국방부는 '08년까지 4만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나 병력자원의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보다 과감한 군 인력 감축도 검토할 필요
- 군별 병력구성은 3군간 균형발전 기조에 맞추어 현행 81(육): 10(해): 9(공)에서 육군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해·공군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